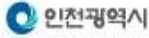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6월 3일(목) 총 5매			
담당 부서	도서지원과	담당자	• 해양환경담당 • 담당자	권익범 박정식	☎440-4891 ☎440-4893
보 도 일 시		6월 3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변을 반려생물처럼 아껴주세요.

- 인천시, 해양수산부와 「반려해변」 공동운영 협약 체결 -
- 기업단체가 특정해변 정화활동, 경관개선 등 추진, 민간주도형 바다 가꾸기 -
-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해양 정화 활동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6월 4일 해양수산부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해 민간 역량 활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민간참여 활성화 도모를 위해 ‘반려해변’ 공동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미국 텍사스에서 개발한 해변입양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반려해변’ 사업은 해변을 반려생물처럼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은 명칭으로서 지역 기업·단체가 특정해변에 책임감을 갖고 정화활동,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며 관리하는 민간주도형 바다가꾸기 사업이다.

6월 4일 거제에서 개최되는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반려해변 공동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기업·단체와 지역 해변 연계 추진과 반려해변 홍보를

위한 서울역, 강남역 등 옥외광고와 유튜브 홍보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반려 해변’ 사업에서 인천시는 반려해변 대상지역 결정과 기업·단체 연계 지원, 수거된 쓰레기 처리 등 참여기관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는 반려해변 참여 기업·단체에 대한 평가 및 포상, 홍보 등 제도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천시는 올해 약 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 바다환경지킴이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 해양환경 정화선을 통한 무인도 쓰레기 수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제정 ▲ 해양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인천앞바다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2022년 웅진군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지원을 위해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영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반려해변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해양쓰레기의 심각성과 감소 필요성을 알리고 민·관이 함께 해양환경 보호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해양 정화 활동을 주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바다환경 보호 캠페인) 및 협약서(안)

〈바다환경 보호 캠페인, 2021.05.31. (월)〉



박남춘 인천시장이 31일 중구 영종도 마시안해변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바다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석해 폐그물을
수거하고 있다.

반려 해변 협약서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이하 “협약기관” 이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 역량 활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민간주도형 바다가꾸기 사업인 반려해변을 공동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은 협약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상호 존중하며, 반려해변을 통해 해양쓰레기 저감에 기여하고, 인천광역시의 해양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관의 임무) 협약기관은 반려해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가. 해양수산부는 반려해변 가이드라인(매뉴얼) 제공, 참여기관 평가 및 포상, 홍보방안 마련 등 반려해변을 정착·확산하기 위한 제도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나. 인천광역시는 반려해변 대상지역 결정, 코디네이터 위촉, 수거된 쓰레기 처리 등 참여기관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한다.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협약기관 간 실질적 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협력) 협약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하며, 본 업무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관 간의 서면합의 등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제5조(사업비용) 협약기관의 활동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간 협의 결과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공동 부담할 수 있다.

제6조(효력발생 등)

가.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3년으로 종료의사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나. 협약기관 어느 일방이 협약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차년도부터 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 본 협약 체결후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나, 사업의 속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협약내용을 변경·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간 상호협의를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업무협약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협약기관이 상호 합의하고, 각 기관의 대표가 2부를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6월 4일

인천광역시장

해양수산부장관
